

현안과 과제

- 한국 사회의 낮은 신뢰도
- 중산층 회복은 '일자리 창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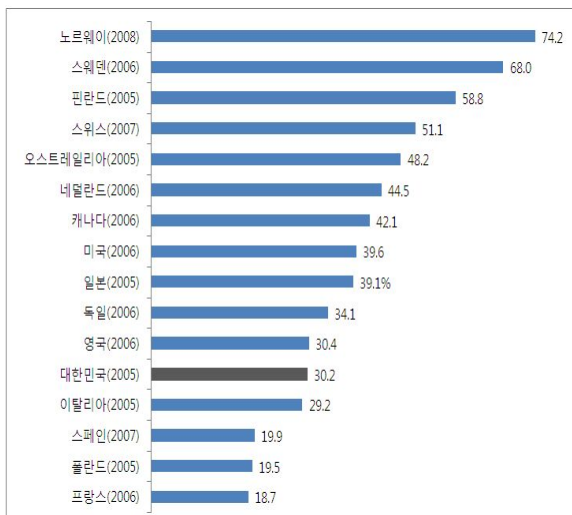
< 요약 >

-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와 세계투명성기구(TI) 등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신뢰도와 투명성은 매우 낮은 편임.
-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31.4%에 불과하며, 부정적 의견이 68.6%에 달했음
 - 20-40대의 젊은 세대, 고학력, 서울과 호남 지역에서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경제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 경제시스템 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분야는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32.4%)와 '관치 경제'(27.2%)라고 응답
 - 이어서, '성장 중심 경제'(21.8%), '패자부활 장치의 부족'(13.6%), '제조업 편중'(5.1%)의 순으로 응답함
 - 30대와 자영업자는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많았고, 40대와 블루칼라는 '관치 경제'를 개선하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20대와 학생은 '패자부활 장치의 부족'을 개선하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43.5%)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
 - 중산층 복원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43.5%),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완화'(21.1%), '고용안전망 확충'(13.2%), '가계부채 부담 해소'(11.4%), '주거 관련 부담 완화'(10.7%)의 순으로 응답함
-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55%가 반대했으며,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부자 증세'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선호
 -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반대했음
 - 복지재원 조달 방안으로서 '부자 증세'(46.1%)와 '지하경제 양성화' (30.5%)를 가장 선호했음. 이어서, '다른 예산 감축'(10.9%), '사회복지세 신설'(9.2%), '부가가치세 인상'(3.4%)의 순으로 응답함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
 -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 양성'(38.2%)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35.8%)에 주력해야 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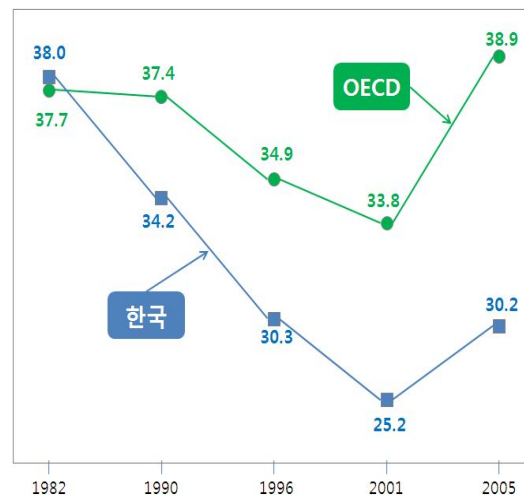
1. 한국의 낮은 신뢰도1)

- (낮은 신뢰지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²⁾의 확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적 신뢰 수준은 매우 낮은 편임
- 우리나라의 신뢰지수는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 우리의 신뢰지수는 30.2%로서, 노르웨이(74.2%), 스웨덴(68.0%), 핀란드(58.8%) 등 북구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38.9%)에도 못 미치고 있음³⁾
- 지난 198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뢰도가 하락하다 2005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OECD 평균과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음
 - 한국은 조사가 시작된 1982년 이후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하향곡선(38.0% → 34.2% → 30.3% → 27.3%)을 그리다 이번 2005년 조사에서 30.2%로 상승
 - 하지만 OECD와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 주요 국가의 신뢰지수 수준(%) >



< 한국 vs. OECD 신뢰지수 비교(%) >



자료: World Values Survey(미시간대)

- 1) 낮은 신뢰지수 현황은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5대 분야별 '10+3' 정책제언', 경제주평 13-02(통권 519호), 2013.1.8, pp35-39)의 내용을 참고함
- 2) 사회자본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새로운 연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무형자산으로서,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고 보장하는 제도, 규범, 네트워크, 가치관 등을 포함하고 있음
- 3) 미시간대학에서 실시하는 World Values Survey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으로 각국의 신뢰지수를 측정하고 있음.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신뢰지수임

- 2012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우리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144개 국가 중 19위이지만, 사회자본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 점수는 전체 144개 국가 중 62위에 불과함
 - 특히 ‘정책결정의 투명성’(133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117위), ‘정부 규제 부담’(114위), ‘정부지출의 낭비 여부’(107위) 등이 매우 취약한 수준

<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 >

항목	순위	항목	순위
재산권 보호	52	정책 결정의 투명성	133
지적재산권 보호	40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 서비스	46
공공자금의 전용	58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	74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117	범죄 및 폭력에 따른 기업비용	44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	50	조직범죄	57
사법부 독립성	74	경찰서비스 신뢰성	39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89	기업경영윤리	56
정부지출이 낭비되는지 여부	107	회계감사 및 공시기준의 강도	75
정부규제 부담	114	기업 이사회회의 유효성	121
법체계의효율성(논쟁해결측면)	80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	109
법체계의효율성(규제개선측면)	96	투자자 보호의 강도	65

자료: 2012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주: ‘순위’는 144개 국가 중 우리의 순위

- (투명성 부족) 국제투명성기구(TI)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투명성이 부족하고 지도층의 윤리의식도 미흡함
 - 법과 규칙을 넘어서서 행사되는 특권, 투명하지 않는 제도와 관행, 엘리트들의 부정부패 등 불신 요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
 - 2011년도 TI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183개 국가 중 43위에 머물렀고, OECD 회원국 34개 국 중에서는 27위로 바닥권임

< 한국의 부패 수준 >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수	4.3	4.5	5.0	5.1	5.1	5.6	5.5	5.4	5.4
순위	50위	47위	40위	42위	43위	40위	39위	39위	43위
/비교국	/133국	/146국	/159국	/163국	/180국	/180국	/180국	/178국	/183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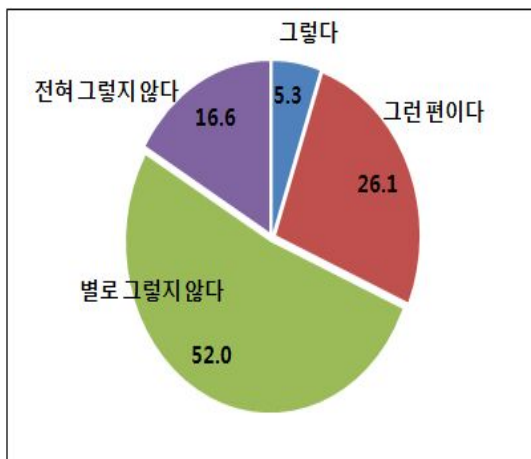
자료: 국제투명성기구(TI)

2. ‘한국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도’ 관련 설문 조사 결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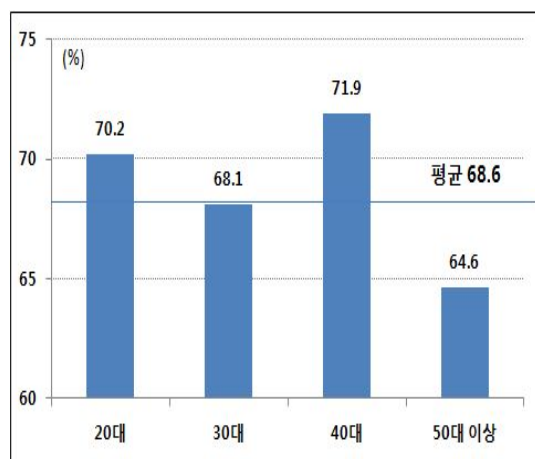
○ (사회 전반의 낮은 신뢰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국민들의 68.6%는 ‘투명하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긍정적인 답변 31.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

-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를 보았을 때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은 ‘그렇다’(5.3%), ‘그런 편이다’(26.1%), ‘별로 그렇지 않다’(52.0%), ‘전혀 그렇지 않다’(16.6%) 라고 답변. 부정적 답변은 68.6%로서, 긍정적 답변 31.4%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옴
 - 연령별로 보면, 40대의 ‘부정적’ 답변 비율이 71.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20대 70.2%, 30대 68.1%, 50대 이상 64.6%의 순이었음. 세대별로 나눈다면, 20-40세대의 부정적 답변 비율이 50대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직업별로 보면, 무직/퇴직자의 부정적 답변 비율이 73.9%로 높았고, 자영업자가 72.5%로서 전체 평균 68.6%보다 매우 높았음.
 - 학력별로는 대졸의 부정적 답변 비율이 71.3%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은 64.5%, 중졸은 59.3%였음
 - 지역별로는 호남지역의 부정적 답변 비율이 78.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울이 76.0%로서 두 번째로 높았음

<사회 각 분야 투명하고 신뢰 가능?>



<부정적 답변(아니다)의 연령별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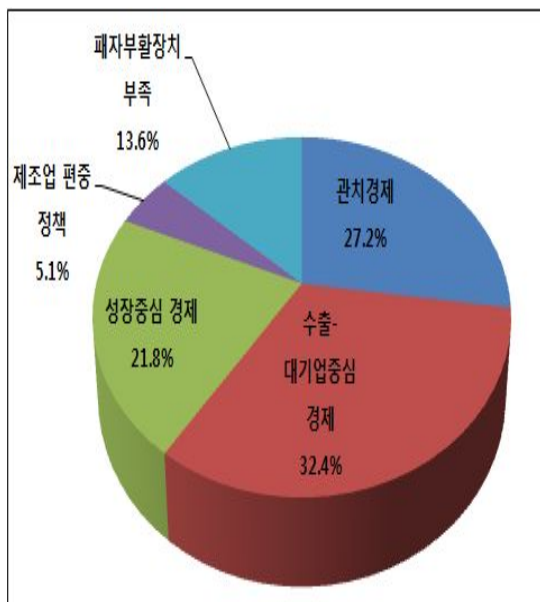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 조사 (2013.3)

4) 현대경제연구원은 2013년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 동안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하여,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3.09임.

○ (경제시스템 개선) 우리나라 경제시스템 가운데 개선이 시급한 분야는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32.4%)와 ‘관치 경제’(27.2%)라고 응답

- 우리나라 경제시스템 가운데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를 질문한 결과,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32.4%), ‘관치 경제’(27.2%), ‘성장 중심 경제’(21.8%), ‘패자부활 장치의 부족’(13.6%), ‘제조업 편중’(5.1%)의 순으로 응답함
-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성장 중심 경제’와 ‘패자부활 장치 부족’에 대해, 30대는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에 대해, 40대는 ‘관치 경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비판적이었음
- 직업별로 보면, 화이트칼라는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에 대해, 블루칼라는 ‘관치 경제’에 대해, 자영업자는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에 대해, 학생은 ‘패자부활 장치 부족’에 대해 특히 비판적이었음
- 결과적으로, 30대와 자영업자는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를, 40대와 블루칼라는 ‘관치 경제’를, 20대와 학생은 ‘패자부활 장치의 부족’을 개선하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경제시스템 가운데 개선해야 한 분야>



<직업별로 응답률이 가장 높은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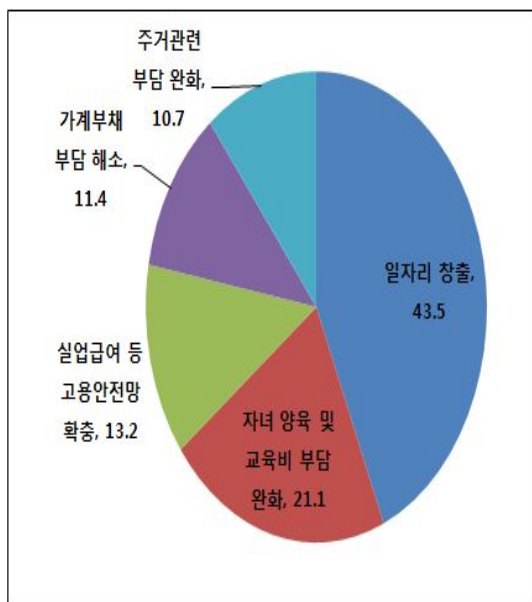
직업 (표본 수)	응답률 가장 높은 분야 (응답률)
화이트칼라 (420명)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 (33.1%)
블루칼라 (98명)	관치 경제 (34.7%)
자영업자 (141명)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 (43.3%)
학생 (91명)	패자부활 장치 부족 (28.6%)
전업주부 (170명)	관치경제 (32.9%)
농림어업 (11명)	관치경제 (36.4%)
무직/퇴직 (69명)	수출-대기업 중심 경제 (36.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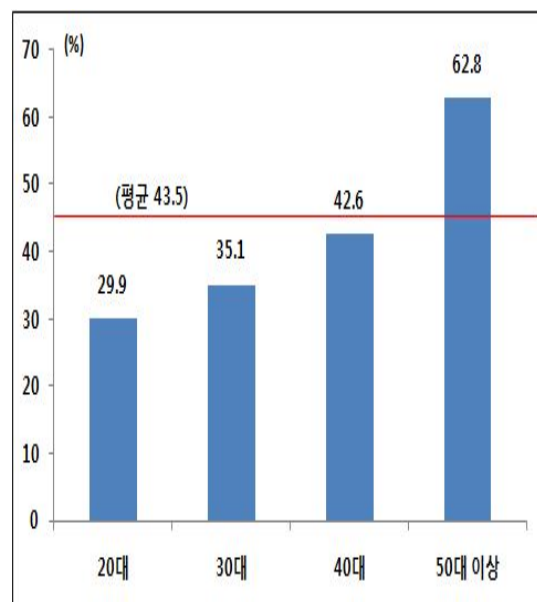
○ (중산층 복원) 중산층 복원을 위해 시급한 정책은 ‘일자리 창출’(43.5%)

- 중산층 복원을 위해 시급한 정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일자리 창출’(43.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완화’(21.1%), ‘고용안전망 확충’(13.2%), ‘가계부채 부담 해소’(11.4%), ‘주거 관련 부담 완화’(10.7%)의 순으로 응답함
-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50대 이상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일자리창출’에 대한 응답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20대는 ‘주거 관련 부담 완화’, 30대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완화’, 40대는 ‘고용 안전망 확충’을 더 요구하고 있음
- 직업별로 보면, 화이트칼라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완화’, 블루칼라는 ‘고용안전망 확충’, 학생은 ‘교육비 부담 완화’와 ‘주거 관련 부담 완화’, 전업주부와 농림어업 종사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가계부채 부담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으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응답률도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지고 있음.

<중산층 복원을 위한 과제>



<일자리창출에 대한 연령별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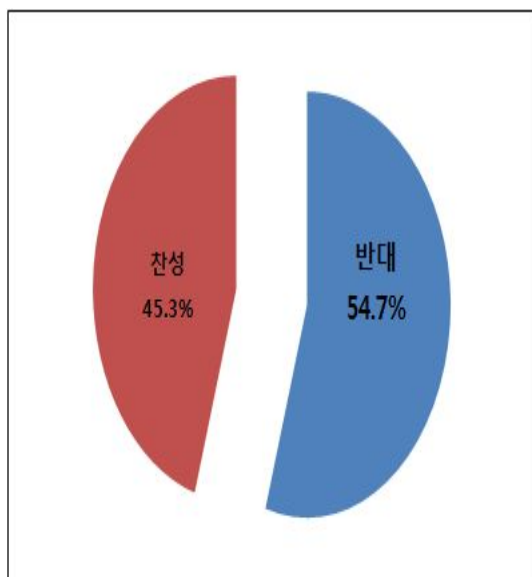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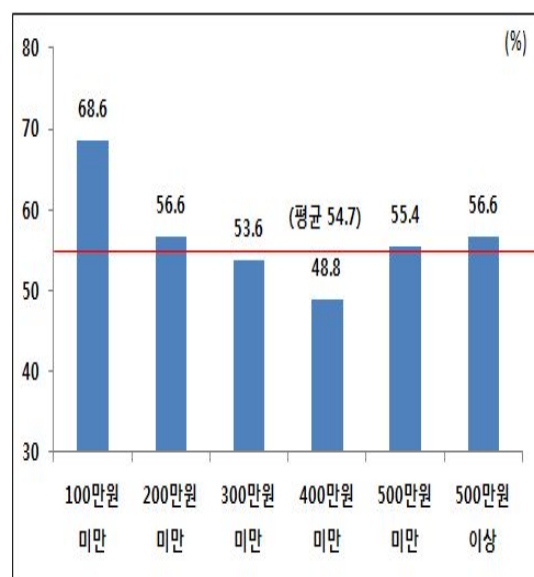
○ (복지를 위한 증세 반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과반수인 54.7%는 반대, 45.3%는 찬성

-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의견은 기혼, 여성, 40대, 전업주부,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고졸 이하 학력층,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남
- 혼인 상태별로 보면, 기혼이 56.3%로서 미혼의 51.3%보다 반대 응답률이 높았고, 성별로 보면, 여성 59.6%로서 남성 49.9%에 비해 높았음
- 연령별로는 40대가 58.8%로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50대 이상 55.6%, 20대 54.2%의 순으로 반대 의견이 높았음
- 직업별로는 블루칼라와 전업주부의 증세에 대한 반대 응답률이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소득수준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이 68.6%로 가장 높았고, 300-400만원 계층이 48.8%로서 가장 낮았으며, 다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반대 응답률이 높아져 5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증세 반대 응답률은 56.6%였음
- 학력이 낮을수록 증세 반대 의견은 점차 높아졌음
-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대구/경북의 증세 반대 의견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찬-반 의견>



<소득수준별 증세 반대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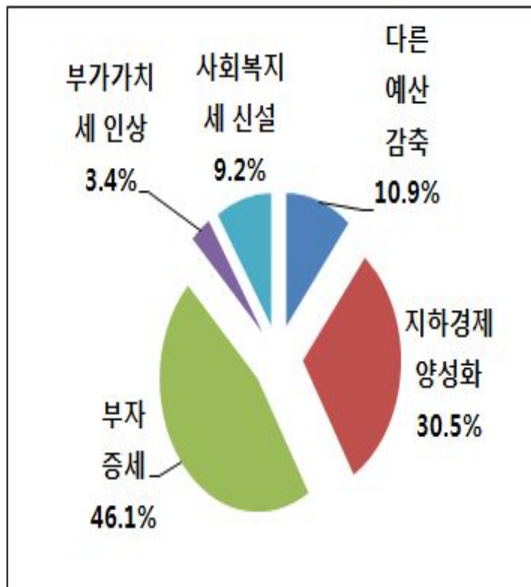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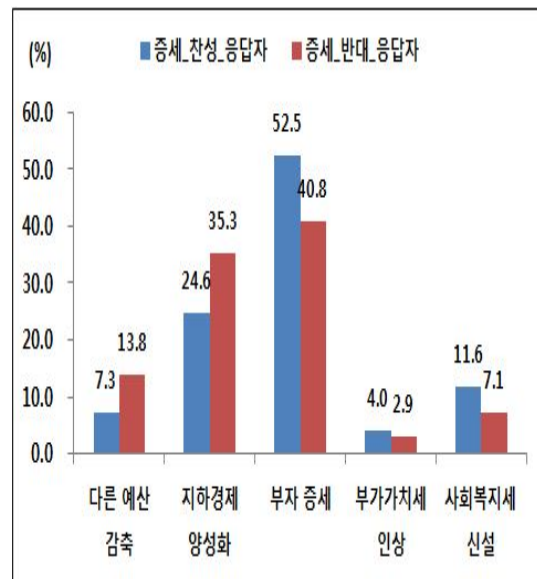
○ (복지재원 조달 방안) 복지재원의 조달 방안으로서 국민들은 ‘부자 증세’(46.1%)와 ‘지하경제 양성화’(30.5%)를 가장 선호함

- 복지를 위한 예산의 조달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은 ‘부자 증세’(46.1%), ‘지하경제 양성화’(30.5%), ‘다른 예산 감축’(10.9%), ‘사회복지세 신설’(9.2%), ‘부가가치세 인상’(3.4%)의 順으로 응답
 - 본인 부담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부자 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다른 예산 감축’ 등에 대한 지지는 모두 87.5%에 달함
 - 반면, 본인 부담으로 직접 연결되는 ‘사회복지세 신설’과 ‘부가가치세 인상’ 등에 대한 지지는 모두 12.6%에 불과함
- 연령별로 보면, 20대, 30대, 40대까지는 ‘부자 증세’ 방안을 가장 선호했으나, 50대 이상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가장 선호.
 - ‘부자 증세’(46.1%)에 대한 응답은 30대와 40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학생, 호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지하경제 양성화’(30.5%)에 대한 응답은 50대 이상, 자영업자, 전업주부, 5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영남지역에서 높았음
 - 앞에서 ‘복지 증세’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경우, ‘부자 증세’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높았음

<복지 재원 조달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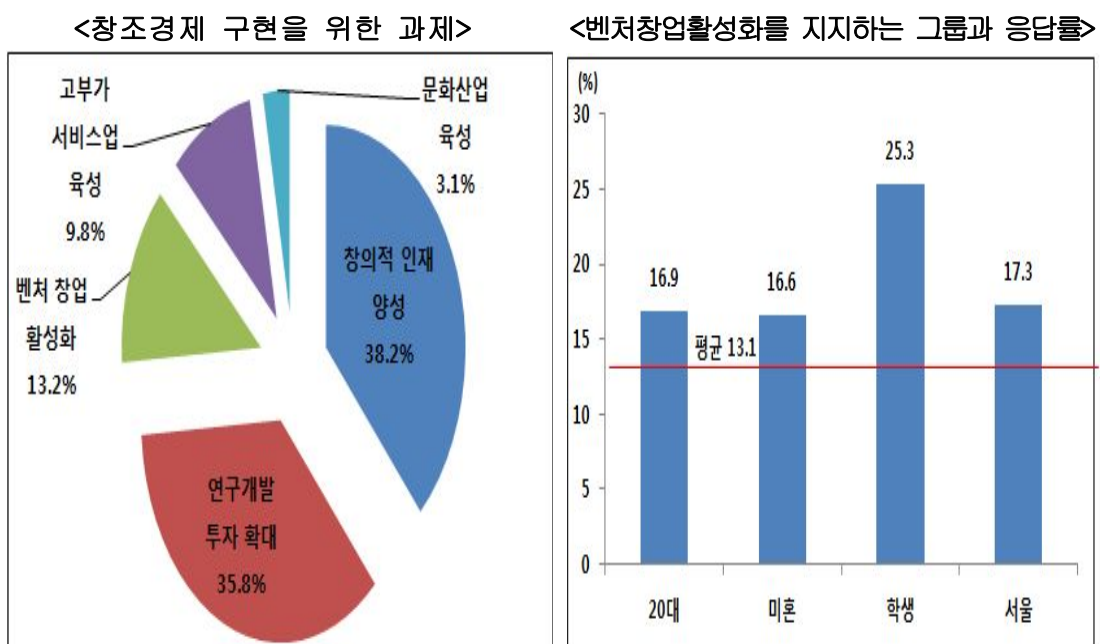
<소득수준별 증세 반대 응답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 조사

○ (창조경제 구현)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 양성’(38.2%)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35.8%)에 주력해야 한다고 응답

-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은 ‘창의적 인재 양성’(38.2%), ‘연구개발 투자 확대’(35.8%), ‘벤처 창업 활성화’(13.1%),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9.8%), ‘한류 등 문화산업 육성’(3.1%) 등의 순으로 응답
- 연령별로 보면,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40대와 50대 이상의 고령층 응답률이 높았으며, ‘벤처창업 활성화’는 20대와 30대의 젊은 층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직업별로 보면, 화이트칼라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가장 중시했으며, 전업 주부와 블루칼라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장 선호했으며, 학생은 ‘벤처 창업 활성화’를 상대적으로 선호
- 학력별로 보면, ‘창의적 인재 양성’ 방안은 학력이 낮을수록 응답률이 더 높아졌으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방안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짐.
- 지역별로 보면, 충청과 호남지역에서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의견이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 지역에서 ‘창의적 인재 양성’ 의견이 가장 높았음. ‘벤처창업 활성화’는 서울, 부산/울산/경남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 조사

3. 시사점

- 첫째, 사회 각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와 공정성을 제고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신뢰도를 높여가야 함
 - 아울러,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의 구현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제고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의 민간 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둘째, 경제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내수 비중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바, 관련 진입장벽의 완화 등 규제개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함

- 셋째,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며, 특히 50대와 60대 등 중고령층의 일자리 욕구가 특히 강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세대별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함
 -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벤처 창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50대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60대 등 고령층을 위해서는 ‘향토문화자원 해설사’, ‘숲 해설사’, ‘초등학교 등하교 지킴이’ 등과 같은 고령친화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넷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 육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교육 시스템을 창의적으로 혁신하는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아울러,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이 선호하는 벤처 창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02-2072-6213, dykim@hri.co.kr)

<참고 1> 조사 개요

○ 개요

- 조사 기간 : 2013년 3월 6일 ~ 3월 12일 (7일간)
- 조사 방식 :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하여 전화설문을 통해 전국 1,006개 샘플을 수집
- 오차 범위 : 95% 신뢰수준에서 ± 3.09
- 조사 대상 :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 응답자 특성

구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자	학생	주부	농림 어업	무직
명	507명	499명	225명	248명	256명	277명	422명	98명	142명	91명	171명	12명	69명
%	50.4	49.6	22.4	24.7	25.4	27.5	42.0	9.8	14.1	9.1	17.0	1.2	6.9

구분	소득수준별						학력별				결혼유무		
	100만	200만	300만	400만	500만	500~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기혼	미혼	기타
명	51명	145명	220명	211명	122명	244명	54명	234명	659명	55명	651명	343명	12명
%	5.1	14.6	22.2	21.2	12.3	24.6	5.4	23.4	65.8	5.5	64.7	34.1	1.2

구분	지역별								지역특성별		
	서울	인천 경기	충청	호남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제주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명	208명	275명	104명	105명	164명	108명	31명	11명	472명	433명	101명
%	20.7	27.3	10.3	10.4	16.3	10.7	3.1	1.1	46.9	43.0	10.0